

중견기업 정책 브리프

MIDDLE MARKET ENTERPRISES POLICY BRIEF

FOMEK

vol.3 2022.3.1~3.31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건의의

●● 2022년 중견기업계 세제건의 (3.3)

- 중견련은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「2022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서」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
- (주요내용) ▲중견기업 세제지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▲중견기업 R&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▲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및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고용 친화적 개편 ▲상속세 부담 완화 ▲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등 20건

정책동향

●●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정보통신기술 석·박사 고급 인력양성 사업 추진 (3.2)

- 정보통신기술 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1,068억원을 투입('21년대비 134억원 증가, △14%), '25년까지 약 1만 5천여명을 양성할 계획
- 올해에는 국가기술주권 강화 및 지역 내 고급 인재부족 등을 대응하기 위해 ▲대학정보통신 기술연구센터(신규 6개, 30억원) ▲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(신규 5개, 50억원) ▲정보통신기술 혁신인재4.0(신규 20개, 25억원) ▲메타버스대학원(신규 2개, 10억원)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

●● [금융위원회] 「기업지배구조보고서」 가이드라인 개정 (3.7)

-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상장기업의 물적분할 등에 따른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「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」 개정
- (주요내용) ① 물적분할·합병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보호를 위한 기업 정책 마련, ②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시 설명 의무 강화, ③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감사위원회 설치계획 기술 등

●● [산업통상자원부] 「2022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」 발표 (3.7)

- 제3차 기본계획('19~'23년)의 주요 추진과제인 3대 제조업(뿌리·섬유·식음료) 중심 제조로봇 보급, 4대 서비스(돌봄·웨어러블·의료·물류) 로봇 분야 집중 육성 등을 위해 2,440억원(전년대비 △10%)을 투자하고, 1,600여대의 서비스로봇을 실증 보급할 예정

-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2023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(안) 확정 (3.8)
 -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,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
- [산업통상자원부] 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(3.10)
 - 녹색보증사업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(발전기업)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제조기업(산업기업)에 3,150억원 규모의 융자 보증
 -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자금, 산업기업은 제품 생산 자금 및 사업운영 자금을 대해 융자보증이 가능하며, 대출금액의 95%이내(중소 100억원/중견 200억원)에서 지원
- [산업통상자원부] 러 정부, 수출금지(제한) 품목 500개 발표 (3.12)
 - 산업부는 3.9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(제한) 조치 분석결과를 발표
 - 러시아는 제품·원자재의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방지를 사유로 3.10일부터 12.31일까지 219개 품목에 대한 수출금지* 및 281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** 조치 시행
 - * (금지품목) 러시아 관세청 수출 통제 품목(반도체소자, 전자C 등)
 - ** (제한품목) 러시아 산업통상부·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부처에서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품목
- [산업통상자원부] 2022년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지원 사업 공고 (3.14)
 - 중소·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신뢰성 및 양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
 - 소부장 6대 분야, 약 150개 과제에 총 470억원을 지원('21년 400억원 지원)하며, 경량화·고효율 등 저탄소 관련 품목 및 공급망 안정화 품목을 우선 지원할 예정
- [산업통상자원부] 2022년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공고 (3.24)
 -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제품 개발 이후 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·중견기업이 전문기관 (공공연구소, 민간평가기관, 대학 등)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최종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
 - 지원 유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,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3.2%, 중견기업은 25% 이상 자부담 필요
- [고용노동부] 제조·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공표 (3.28)
 - '21.11월부터 '22.1월까지 제조·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총 102종의 명칭, 유해성·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
 - 해당 신규화학물질 제조·수입 사업주는 물질 양도·제공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*에 유해성·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제공해야 하며, 이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 보건자료(MSDS)를 사업장에 게시·비치하고, 근로자 교육 및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함
 - * (물질안전보건자료, MSDS)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유해성·위험성 정보, 명칭 및 함유량,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

- [고용노동부]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(3.28)
 - '22.4.13~12.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(E-9, H-2)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함
 - 단,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'22.4.13~6.30 기간 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한해 50일 연장
- [중소벤처기업부]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할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(3.29)
 - 업력 45년 이상의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중소·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모집 (3.29~5.13)하며, 현장평가 및 평판 검증을 거쳐 8월경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선정 예정
 - *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제한기준(종전: 3천억원 미만에 한해 신청 가능)이 폐지되어 매출액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- [산업통상자원부] 미래차·친환경·바이오분야 20개사 사업재편 승인 (3.30)
 - 수소·전기차, 친환경, 바이오 분야 20개사의 사업재편을 승인*하고 상법·공정거래법 상 절차간소화 및 규제유예, R&D·금융·세제·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

입법동향

1 정부

- [환경부] 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, 재활용 기준 마련 (3.3)
 -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재활용이 가능토록 법적 기준을 완비하고,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 등을 위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*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- * 폐기물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,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 - (주요내용)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마련, 생활폐기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 등
- [환경부] 도로 중 유해물질 사용 규제한다 (3.6)
 - '도로 함유 휘발유성유기화학물 면제물질 목록'에서 인체유해성 문제가 제기된 '파라 - 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(PCBTF)'를 제외
 - 4.1일부터 제조·수입되는 도로에 대해 해당 물질 기준치 초과여부를 판단하며, 기존 제조·수입된 도료는 9.30일까지 공급·판매하거나, 진열·보관(판매목적) 가능
- [국토교통부]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(3.10)
 - 민·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개발이익 환수 강화,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관리·감독 강화를 위한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(3.11~34.20) 및 「도시개발법 업무지침」 개정안 행정예고(3.11~3.31)
- [방송통신위원회]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(고시) 제정 (3.10)
 -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▲거래상의 지위 ▲강제성 ▲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

- [국토교통부] 국가공간정보기본법·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(3.15)
 - 민간기업이 자율주행, 증강·가상현실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·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「국가공간정보기본법」 시행령 및 「방치건축물정비법」 시행령을 개정하고 3.17부터 시행
- [환경부]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(3.15)
 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(GPS)를 설치하도록 하고, 폐기물 인수·인계시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과 진입로·계량시설·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(CCTV)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방법 및 절차 마련

* '22.10월 순차 시행(건설폐기물('22.10월) → 지정폐기물('23.10월) → 사업장일반폐기물('24.10월))
- [환경부]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부담 낮춘다 (3.15)
 -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연간 제조·수입량 1톤 미만의 화학물질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고,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'화학물질 등록,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' 추진
- [중소벤처기업부] 중고차판매업,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 (3.17)
 -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▲소상공인 영세성 ▲시장 성장성 ▲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하여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
- [환경부]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,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(3.22)
 -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, 감축·적응 및 전환 시책,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규정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(안) 국무회의 의결되어 3.25부터 시행
 - (주요내용) ▲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% ▲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▲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적용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 ▲기후대응기금 운영 등
- [산업통상자원부]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(3.23)
 -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 제정(2.3 공포) 후속조치로 전략기술 지정 및 지원을 구체화한 「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(3.23~5.2)
 - (주요내용) ▲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신설 ▲전략기술 및 특화단지 지정 절차·요건 구체화 ▲특성화대학 지원(예산 및 정원 조정) 등
- [국토교통부]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(3.28)
 - 「주택법」 개정에 따라 '22.8월부터 적용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,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」 입법예고(3.28~5.9) 및 「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」 행정예고(3.28~4.18)

2 국회
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두관 의원, 3.15)
 -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,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
-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, 3.17)
 - 승강기 제조·수입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단체표준으로 등록된 승강기에 대해 승강시 설계에 관한 심사를 받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 절차 중 설계심사를 면제하여 중소기업 승강기의 경쟁력 제고
-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 의원, 3.18)
 -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중 ‘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’에 온라인상의 행태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행태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사전에 방지
-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 의원, 3.18)
 -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, 기존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이관
 - 분쟁조정기구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 의원, 3.21)
 - 주권상장법인 물적분할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증권시장의 공정성 제고
-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 의원, 3.22)
 -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‘주주의 비례적 이익’을 추가하여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 부과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 의원, 3.23)
 -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상장을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,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
-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인숙 의원, 3.23)
 -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
-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 의원, 3.24)
 -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,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단서조항 신설
-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 의원, 3.24)
 - 현장실습생에 대한 부당 대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 의원, 3.28)
 - 차입공매도 상환기관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 비율을 개인투자자 및 기관·외국인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 의원, 3.29)
 -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 연구개발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
-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 의원, 3.29)
 -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입점지역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상권영향평가 강화
-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정 의원, 3.29)
 - 근로감독관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감독관으로 배치하여 현장실습 사업체 사전 점검 및 감독 강화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석준 의원, 3.29)
 -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안전교육과 같은 인적투자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
-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은미 의원, 3.30)
 - CCTV, 지문인식, 컴퓨터·인터넷 모니터링 등 근로자의 작업과정, 상황, 행동 등을 관찰·수집·기록할 수 있는 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감시설비로 규정하고,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 (단,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 노동조합 등과의 합의를 통해 설치·운영 허용)